

## 고용노동부 출범과 일자리 창출

김 승 택\*

지난 7월 5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담당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노사문제의 해결에서 고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보도되었지만,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축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과거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가져간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출범과 함께 정책방향으로 설정된 수요자와 시장 중심 노동정책과 고용친화적인 정책은 기존의 법제도가 만약 기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치우치면서 신규 고용창출이나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이러한 법제도를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생산가능인구 중 과다한 비중의 비경제활동인구 존재, 청년실업의 증가, 노령인구의 급증, 경제성장의 성과가 적절히 분배되지 않는 구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과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빈곤층의 증가 등 많은 노동시장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며, 국정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정책방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구조적으로 뿌리가 깊은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인 고용전략의 설계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단계별로 완회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순위의 결정과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의 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과거 경제부처는 노동정책을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쯤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최근 상황을 두고 볼 때, 실제 노동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제부처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정책에 있어 고용노동부 내부의 정책조율을 넘어서 부처간 연관된

\*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장(stkim@kli.re.kr).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공조 체계가 필요하며, 부처에 따라 이해관계나 대응논리가 다른 정책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정책 선택의 기준에 있어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 단계에서 정책 추진 후 성과 평가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연구가 많이 있으나,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이 올바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들을 어떤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많은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그 중 일부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일부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 특정 정책을 실시할 때마다 각 이익집단의 반응에 일일이 신경을 쓰기보다 그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정책을 수정·보완 또는 폐기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은 사전적인 고용영향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즉 노동정책에 관한 정책개발과 사전 고용영향 분석, 관련 데이터 축적, 성과평가가 일련의 체계적 과정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 - 정책 개발 - 사전 고용영향 분석 - 정책 추진 - 성과 평가 - 환류(Feedback) 및 수정·보완’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과거 정부는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미시적인 정책에서 강점을 가진 반면, 거시경제의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행조건인 안정적 투자의 확대라는 과제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반면 최근에는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를 다른 산업국가와 비교할 때 성공적으로 벗어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지향하며 기업의 투자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2010년 현재 6%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도 최근 상용직 위주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의 미시적 정책 측면, 즉 앞에서 지적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각 분야별로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출범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각 분야별로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과제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단기 고용전략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KL**